ESG 자문 그룹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2년 Vol.29

D R &
A J 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자문 그룹을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은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 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은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격주로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6월 2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복합시설로 설치가 추진됨에 따라, 입지여건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된 것입니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개정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소충전소 안전영향평가 실시
   현행 수소충전소는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은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함. 평가결과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장치 추가 또는 설비 배치변경 등 시설 보완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2.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교육 신설
   수소충전소는 일반적인 고압가스시설과 달리 초고압(100MPa) 배관을 설치함에도 배관(튜빙)시공에 특화된 교육이 없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배관(튜빙)시공교육과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을 신설

3.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방호벽 설치
   충전소 밖 보호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이나 충전소 안 보호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근무자 사무실, 편의시설 등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도 수소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경우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개정

4.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검사기준 강화
   충전소 운영 중, 압력용기의 위치, 용량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정

5. 수소충전소에는 검사받은 수소용품만 사용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는 검사받은 수소용품만 설치·사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부과

[별첨1][보도자료] 220601 산업부, 수소충전소 이제 맞춤형으로 안전관리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 중간발표회를 개최하여, 제도설계(안)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란, 법적 규제와는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향도 민간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공급망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첨2][보도자료] 220609 산업부,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 논의

환경부 – 환경규제 모래주머니 해소, 현장 파악 후 신속 추진

환경부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기물관리법만 적용하기로 하되,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학물질관리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별첨3][보도자료] 220608 환경부 – 환경규제 모래주머니 해소, 현장 파악 후 신속 추진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SG 펀드 운용사들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회사들의 회사명을 제재하는 투자회사법(The Investment Company Act) 개정, 투자자문회사와 자산운용사의 ESG 공시 표준화 등 2가지 규칙개정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개정안은 펀드 이름에 관한 규정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회사의 이름에 ESG 등 특정 투자 성향이 들어간다면 적어도 전체 투자자산의 80%가 이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ESG 공시 기준 표준화에 관한 규정으로, ESG 펀드들은 관련 영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변화를 지향하는 임팩트 펀드의 경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예, 프록시보팅, 기업참여 등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 진척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린워싱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국 금융당국이 운용사를 대상으로 ESG 상품의 투자전략 및 대상에 대한 공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그간 문제가 되었던 불투명성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美SEC, 그린워싱 제재안 상정, 주목할 점은? (이코리아, 6월 2일자 보도)

2. 글로벌 투자업체들이 그린워싱 논란에 휩싸이면서 곤혹을 겪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독일 자산운용사인 DWS그룹의 뵈르만 CEO는 지난해 2월 "DWS그룹에서 내놓는 모든 신규 투자 상품이 ESG펀드가 될 것"이라며 ESG 투자 행보를 예고했지만, 한 달 뒤 데지레 픽슬러 DWS 전 지속가능경영 책임자가 "DWS그룹이 2020년 연례보고서에서 ESG 역량을 실제와 다르게 드러냈다"고 내부고발을 하자 SEC와 독일연방금융감독청이 지난해 8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엔 독일 검찰이 DWS그룹 사무실과 DWS그룹의 대주주인 독일 도이체방크의 프랑크푸르트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검찰 측은 DWS그룹이 내놓은 펀드가 실제 판매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투자 상당수에서 ESG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SEC로부터 ESG 펀드 운용 과정을 조사받고 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ESG 펀드의 80%를 자체 펀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주식으로 구성하려고 하며 술, 담배, 무기, 석탄, 원유, 가스 판매 등으로 수입 대부분을 얻는 기업을 배제한다고 홍보해 왔는데, 펀드를 운용하면서 공시 의무를 준수했는지, 투자자에게 알린 내용과 다르게 투자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린워싱에 '칼바람'… 자문사 벌금 이어 도이체방크 자산운용사도 압수수색 (한국경제, 6월 6일자 보도)

"미 증권거래위, 골드만삭스 '가짜' ESG 펀드 조사" (연합뉴스, 6월 11일자 보도)

3.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반도체, 화학,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제조업체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정부에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개선을 요구했고,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으로 개선안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먼저, 기업이 국내 본업 외에 해외 사업이나 친환경발전소 건립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경우 의무감축량의 5%까지만 인정해주는데 이를 1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배출량이 2배 증가할 때마다 할당량을 늘려주는데 이 조건을 완화하여 배출량이 1.5배 증가하면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배출권' 규제 완화…외부 감축실적 인정 5→10%로 (한국경제, 6월 7일자 보도)

4. 유럽의회가 가솔린·디젤 차량 등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2035년부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8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100% 줄이는 안을 찬성 339표, 반대 249표, 기권 2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EU 27개 회원국에서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는 EU가 지난해 7월 내놓은 기후변화 입법 패키지 'Fit for 55'의 일환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럽의회의 이번 결정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EU의 회원국 정부들과 최종 협상 과정이 남아 있지만, 유럽의회의 결정은 인구 4억4700만명을 가진 EU 시장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없애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유럽서 내연기관 …'2035년'에 판매 종료 (매일경제, 6월 9일자 보도)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ESG, 건설/부동산, 기업자문

E sblee@draju.com

T 02-3016-5276

기소현 파트너변호사

ESG, 기업자문, 금융

E shki@draju.com

T 02-3016-8702

노현철 파트너변호사

ESG, 국제, 기업자문

E hcnoh@draju.com

T 02-3016-873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 이슈리포트

2022년 Vol.2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16층

T. 02-563-2900 **E.**pr@draju.com **H.** www.draju.com